은행, 현금성 외화 비축 의무화

'은행 외화 LCR 규제 도입 방안' 발표… 내년부터 2019년까지 규제비율 80%로 확대

내년부터 금융위기를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방안이 도입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는 은행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키워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감독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화 LCR 규제를 공식 규제로 도입하고 자율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 중복 규제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외화 LCR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고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정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기불일치, 자산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외화 LCR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현재 최저지도비율은 일반은행 50%, 특수은행 30%다.

바젤 권고 사항인 만큼 지금까지는 은행의 외화LCR이 지도비율보다 낮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건전성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하고 은행에 외화 LCR 규제 전격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외화 LCR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로 적용된다.

단 총 부채 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이 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도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화 LC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 모니터링 비율과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규제 비율을 차등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19년 80%까지 올린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2019년 80%까지, 산업은행은 내년 40%에서 2019년 6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규제는 매 영업일마다 외화 LCR 비율을 산출하되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화 LCR 비율 1~2회 위반시 해당 은행은 사유서·달성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4회는 매 회당 5%씩 규제비율 상향, 5회 이상일 경우엔 규제 달성시까지 신규차입 정지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매월 평균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되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실물부문 외화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비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정리를 위해 7일 만기불일치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비율인 여유자금비율, 외화 안전자산보유비율, 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도 실효성이 낮아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화 LCR 규제 도입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시 실물부문에 안정적 외화공급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복규제, 실효성이 없는 규제, 비공식 규제 등도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은 해소하고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꿈꾸는 대로 KB국민은행은 최근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충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를 개최했다. 방송인 김제동이 학생들과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개편 배경은

외화 차입 억제 → 유출 억제

정부가 16일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개편한 것은 은행의 외화 자금 차입을 억제하던 것에서 자금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됐음을 뜻한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자금 투기성 자금의 유입 압력이 강하던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에 비해 과도하게 단기외채를 늘리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해놓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외화 자금의 일방적인 유입 상황이 약화됐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자금 유출의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화 자금 차입 문턱을 낮춰 자금 유출 압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선물환포지션규제의 경우 국내은행은 3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에는 최근 단기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다.

2011년 1398억 달러 수준이었던 단기 외채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분기 1028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또 3월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7.8%를 기록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6.6%로 금융위기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안진수 기자

방통위 상임위원간 내홍, 1주일만에 봉합

김재홍 부위원장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기주 위원 "반대 발언 한 적 없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거부로 촉발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 갈등이 16일 일주일만에 봉합됐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기관으로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이 합의해 정책을 결정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주 전체회의 때 김재홍 부위원장이 주재한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긴급 간담회와 기자설명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거친 발언을 주고 받았다.

16일 전체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 사실조사 필요성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위원회 운영을 두고 다른 의견이 나왔지만 감정 섞인 대립은 없었다.

우선 김재홍 부위원장이 전체회의 직후 기타발언을 신청, 지난주 '이기주 상임위원이 LG유플러스 단독 사실조사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기주 위원은 김 부위원장이 주재한 긴급 간담회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발언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책 당국자인 상임위원이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명예와 불명예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와 근거, 정책 철학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기주 위원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지난주 발언은 부적절했다. 실무자, 상임위원, 기자 누구에게도 사실조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이 개별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전형적인 흠집내기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듯한 발언이었지만 지난주 같은 대립 국면은 없었다.

그는 "방통위 위상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제안한다. 건전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전에 위원간 협의 없이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공청회나 워크숍과는 다르다. 회의 운영에 대해 위원장께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 추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3기 방통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진수 기자

사회적 약자 22명에 '새 삶' 선물

현대 기프트카 사업… 1인 평균 2,800만원씩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Gift-Car) 사업이 전북지역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기프트카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와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데 목적을 둔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이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12명의 전북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기프트카 사업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월 평균수입이 종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새 삶을 위한 자립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들 12명은 1인당 평균 기프트카 구입비와 창업자금,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 2,816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개인별 상황에 맞춰 이를 이동판매업과 기술서비스업 등에 적극 활용한 결과 월 평균수입이 종전 91만원에서 220만원으로 242%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 중 IMF 사태 때 거액의 빚을 진 채 사업에 실패한 권명호 씨(49세, 전북 전주시)는 빌린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다가 기프트카 지원을 발판 삼아 농산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선 결과 월 평균수입이 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633%나 급증하는 성공 신화를 일구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총 3억원을 들여 전북지역 사회적 약자 10명에게 기프트카를 지원 중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 중 한 명인 양희성 씨(41세, 전북 전주시)는 사업 실패 뒤 두 자녀와 함께 월 평균수입 100만원으로 어렵게 살아가다가 기프트카를 이용해 산지직송 판매에 나서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기프트카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